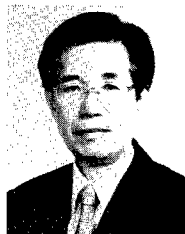


IMF 한파, 그것은 농공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근 우

한국농공학회 편찬위원장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97년 11월의 외환부족사태로 야기된 금융대란과 경제파탄의 위기는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도 국내 유수의 큰 기업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있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리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시장의 물기는 널 뚫듯 치솟아 환란의 쓴맛을 실감케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새 정부에 의해 재정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IMF 한파를 더욱 뼈저리게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속에서 농공부문 역시 사업, 행정, 교육, 연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어려움에 직면케 될 것이다. 농공부문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되며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폭적인 재정투자 감축은 각급 기관,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 농공 전부문에 대한 투입물량 감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농공분야 행정기구의 감량, 교육과 연구부문에 대한 지원의 감소가 예상되기도 한다.

우리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95년

1월 1일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과 함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이어 '97년 1월 1일부터는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이 발효되었다. 여기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98년부터는 농업기반 정비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완전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 발전을 구가하던 농공기술의 서비스분야도 이제부터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방을 맞는다해도 어려운 마당에 요즈음의 경제난까지 겹쳐 있으니 참으로 힘겨운 경쟁의 장에 내던져진 격이다. 한마디로 농공부문에 예외 없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농공부문의 준비와 대처는 참으로 미흡하다. 아직까지도 각 분야별로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사태에 망연자실하였거나, 엄청난 국가적 재앙의 파장이 아직은 우리의 가시권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이러한 냉엄한 현실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부터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문제점을 적시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농공분야의 가장 큰 취약점은 농공기술이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 과학기술체계라는데 대한 논리 정립의 미흡과 확고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신뢰에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의 개발을 왜 농공분야에서 주도해야 되는지, 농업용수의 개발을 왜 농림부에서 해야하는지, 하구호의 축조가 환경의 보전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경지정리사업이 택지개발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모든 기술체계는 다른 유사 기술체계와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객관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우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주장하기 힘들며, 결국에 가서는 다른 유사학문에 종속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조짐이 바로 진정한 농공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농공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는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나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몇가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농공관련 각종 법규와 기준을 정비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농공관련 제 법규와 관행, 계획설계기준과 기술 편람 등의 개편과 저술이 포함된

다. 각종 제도와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면 농공부문의 사업체계에 대한 법적, 기술적 투명성과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지 10년이 넘게 방치된 낡은 설계기준과 책장속에 내버려진 '70년대에 만든 초라한 농공기술용어집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설계기준의 정비는 화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합리성, 효율성, 현실성, 첨단성 등을 생명으로 하는 이 기준은 농공기술의 요체로서 농공의 알파오메가이다. 농공기술의 정체성은 바로 이 설계기준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고, 이 기술의 합리성과 선진성은 농공기술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이고 수준높은 설계기준의 제정과 시행은 부실공사의 방지, 공사시행의 효율성 제고, 기술 수준의 향상 등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공기술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둘째, 농공기술 관련 국립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교육을 개혁하여 개발 및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연구소의 기능강화 및 대학교육의 개혁을 통하여 실천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공연구 실태는 그 규모와 질의 측면에서 빈약하기 그지 없다. 농어촌개발사업에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재 이 분야를 담당하는 농공부문에 국립연구소 하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조연합회에 연구소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국립연구소와는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대학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소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공공연구소의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적 감축기조속에서 국립기관의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의 유사 국립연구기관에 농공연구기능을 부가하거나 비국립연구소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구의 방향도 기초이론의 연구보다는 실용화에 관련된 연구나 새로운 선진기술의 토착화연구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체제 역시 이번 기회에 손을 보아야 하며, 학과의 명칭문제를 비롯하여 교과과정의 개편, 학부제 등 대학교육의 구조도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농공학회를 활성화시켜 농공의 구심점을 구축하여야 한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현실을 보면 농공부문에는 구심점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일찍이 1957년에 창립되어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농공학회가 형식상 2,000여 농공인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공인들에게 비전과 방향을 제정하는 선도적 역할,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적 역할, 인화와 단결을 도모하는 친목적 역할 등 학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학회

가 농공의 구심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다. 농공학회가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학회의 권위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실질적 권위는 학회에 대한 신뢰와 위임된 권한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정책의 심의와 자문, 기술적 판정, 저술과 용역연구 등의 책무가 학회에 위임된다면 강력한 구심력이 생기게 되고 이는 회원의 관심과 주의를 학회로 집중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폭넓은 배려, 농진공이나 농조연합회 등 관련 대형 기관들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제안들은 단기적으로는 농공부문이 처한 오늘의 냉엄한 내외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조치로서의 의의가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농공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농공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 농공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념을 실천하는 데 한마음이 된다면 이번의 재앙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시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MF 한파, 그것은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 있다.